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교육의원 전용천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1년 9월 9일

○ 회부일자 : 2011년 9월 15일

3. 제안이유

- 보조금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기관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 이의신청” 등의 조문 신설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에는 기관카드 사용을 명문화하고, 교부 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안 제8조의2)
- 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안 제18조의2)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 9. 22.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기관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 이의신청” 등의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기관카드 사용 의무화” 하도록 한 것은 현행 금융거래에서 법인이든 비법인 단체 등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표 1>과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의 사례와 <표 2>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이에 따른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이라 생각되며,

<표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1189(2009.8.3)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규칙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 권고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 보조금 사용 시 기관카드 사용 의무화 - 보조금 집행 시 기관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 정산 시에는 증빙서(영수증 발급 등)을 제출토록 규정	보조금 집행 투명화	조례개정

<표 2>

충청북도교육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천원)

년 도	지원단체수	지원금액	집행액	비 고
2008	163	1,757,555	1,729,217	
2009	114	1,681,449	1,665,733	
2010	88	2,039,609	1,946,194	

※ 참고 : 충청북도교육청의 '08~09년 행정사무감사, '10년 결산검사 자료

제2항의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한 것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상당수 보조사업이 별도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개정이라 생각됨.

- 안 제18조의2에 “이의신청”을 신설한 것은 민주시민 사회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등 교육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그 밖에 안 제14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조문의 자구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재정법[시행 2011. 9. 9][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3.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21호, 2011. 9. 6, 일부개정]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공금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1.9.6>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목개정 2011.9.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 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